

한국환경정책학회 2026 춘계 학술대회

# 2035 NDC와 녹색전환

2026년 2월 27일(금) 11:00~17:30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82동  
103호, 113호, 114호, 115호



한국환경정책학회

# 한국환경정책학회 2026 춘계 학술대회

## 개최일 및 장소

- 주제 : 2035 NDC와 녹색전환
- 개최일 : 2026년 2월 27일(금) 11:00~17:30
- 장소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82동 103호, 113호, 114호, 115호

일정		발 표 및 내 용		
1부	11:00~11:30	사전 등록		
	11:30~12:20	정기총회 및 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82동 103호]		
	12:20~12:30	휴식(10')		
	12:30~13:30	<b>개회식</b>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82동 103호] 개회사 -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 윤순진 축사 - 한국정책학회 회장 이석환 기조발제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 실장 오일영 [2035 NDC와 녹색전환]		
2부	14:00 ~ 15:30	<b>일반 세션 1</b>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규제와 국제 정책 변화	<b>학생 세션 1</b> 기후적응과 도시 회복력	<b>학생 세션 2</b> 탄소중립 산업전환과 재생에너지 거버넌스
	15:30~15:50	휴식(20')		
	15:50~17:20	<b>일반 세션 2</b> 글로벌 ESG 규제와 정의로운 전환의 과제	<b>학생 세션 3</b> 녹색전환과 삶의 질	
	17:20~17:30	우수 논문 시상식		

※ 운영사정 등에 따라 세션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회사

존경하는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원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2035 NDC와 녹색전환」을 주제로 열린 2026년 한국환경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는 이곳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여러 세대의 연구자와 실무자, 학생들이 한자리에서 탄소중립과 녹색전환의 길을 모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2030 NDC 이행의 성패가 가시화되는 동시에, 2035년을 향한 새로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장기전략을 설계해야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감축과 적응, 정의로운 전환을 아우르는 정책 의제들을 다루면서, 에너지, 도시, 산업, ESG, 녹색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교류하고,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발표되는 논문과 정책 토론들은 2035 NDC가 단순한 수치 목표를 넘어, 지역과 세대, 계층 간 형평성과 삶의 질 향상을 담보하는 '녹색전환'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줄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각자의 연구와 실천 경험을 공유해 주시므로써, 한국형 녹색전환 모델을 구체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기여를 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학회를 이끌어 온 회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는 각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저는 이번 춘계학술대회를 끝으로 회장 임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임기 동안 코로나19 이후 대면·비대면 학술활동의 재구조화, 탄소중립과 ESG 등 새로운 의제에 대한 학술적 대응, 그리고 학회의 세대·분야 간 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여러분의 헌신과 연대 덕분에 학회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회장직에서는 물러나지만, 한 사람의 연구자이자 회원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학회의 활동에 꾸준히 함께할 것입니다. 새로 선출되실 차기 회장단과 집행부가 더 넓은 시야와 새로운 방식으로 학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아낌없는 지지와 참여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여러 이사님들과 사무국, 후원 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 주신 모든 발표자와 토론자, 좌장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논의가 2035 NDC와 녹색전환을 향한 한국환경정책학회의 집단 지성을 한층 더 성숙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  
윤순진 올림

# 축사

존경하는 한국환경정책학회 윤순진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연구자와 학생, 정책 실무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정책학회 회장 이석환입니다.

먼저 「2035 NDC와 녹색전환」이라는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한국환경정책학회와, 오늘 행사  
를 준비해 주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35 NDC는 단순한 감축 목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산업,  
도시, 에너지, 재정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는 전환의 과제입  
니다. 오늘 발표 주제들에서 보이듯, ESG 제도화, 순환경제,  
디지털 기반 그린인프라, 정의로운 회복탄력성 등은 감축과 적응, 효율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정책을 넘어 정의와 책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환의 비용과 편익이  
공정하게 배분되고, 취약계층의 회복력이 강화될 때 비로소 녹색전환은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연구자들의 창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또한 우리 학문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축적이 정책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이라 기대합니다.

한국정책학회 역시 AI 전환기 정책 거버넌스 혁신과 정책실험, 데이터 기반 평가체계 구축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환경정책 연구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NDC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 설계, 정책 평가, 숙의적 의사결정 구조의 정착을 위해 양 학회가 긴밀히 협력한다면 학문적  
시너지는 더욱 커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2035 NDC는 하나의 목표연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집단적  
약속입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가 그 약속을 더욱 구체화하고, 녹색전환의 경로를 정교하게 다듬는  
지적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춘계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깊이 있는 발표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 뜻깊  
은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총회를 통해 새롭게 취임하시는 장기복 회장님께도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임기 동안 학회의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끌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2.27  
한국정책학회 회장 이석환

## 1. 일반 세션 1

가. 주제 : ESG 제도화와 공공부문 탄소중립 정책·규제 거버넌스

나. 개최일 및 장소

- 개최일 : 2026년 02월 27일(금) 14:00~15:30
- 장 소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82동 114호

다. 좌장

- 변병설(인하대학교 교수)

라. 토론자

- 최정석(중부대학교 교수)
- 오수길(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 김지환(제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마. 발표자

- 황진후(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연구교수)
  - 개발행위 규제로서 차등 경사 기준의 공간적 효과: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 주지형(한양대학교 박사후연구원)
  - From EU Battery Regulation to Global Practice: Policy Transfer and Diffusion of EV Battery Circular Economy in South Korea and Cambodia

# 초록

개발행위 규제로서 차등 경사 기준의 공간적 효과: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Spatial Effects of Differentiated Slope Criteria as a Development Control Tool:

A Case Study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outh Korea

• 황진후\*\* (Jinhoo Hwang), 이상욱\*\*\* (Sangwook Lee), 유영재\*\*\*\* (Youngjae Yoo), 전성우\*\*\*\*\* (Seongwoo Jeon)

개발행위에 대한 경사 규제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한 환경 훼손과 재해 위험을 저감하기 위한 핵심적인 토지 이용 관리 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경사 규제 기준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에 위임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할 지역 전체에 동일한 경사 기준을 적용하는 일괄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적 민감도와 보전 필요성이 높은 특정 지역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차등 규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등적 경사 규제가 실제로 지역의 개발 가능 공간과 환경적 가치 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사례로 하여, 일괄 경사 규제와 차등 경사 규제가 개발행위 제한 공간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표고모형(DEM)을 활용하여 경사도를 산출하고, 전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일괄 규제 시나리오와 지역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는 차등 규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각 시나리오별로 경사 규제에 의해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도출한 후, 해당 지역의 면적 규모, 토지피복 구성, 그리고 생태자연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활용한 환경적 가치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경사 규제의 효과를 단순한 개발 가능 면적의 증감이 아닌, 개발행위로부터 보호되는 공간의 성격과 환경적 가치 측면에서 해석함으로써, 차등적 경사 규제가 개발행위 관리와 환경 보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 도구로서 가지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경사 규제를 포함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개선과 지역 맞춤형 토지이용 관리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과제번호 RS-2024-00342764) 수행되었습니다.

\*\* 주저자,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연구교수(i0255278@korea.ac.kr)

\*\*\* 공동저자,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박사과정(dltkddnr8962@korea.ac.kr)

\*\*\*\* 공동저자,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연구교수(lemonesty@korea.ac.kr)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교수(eepps\_korea@korea.ac.kr)

## From EU Battery Regulation to Global Practice: Policy Transfer and Diffusion of EV Battery Circular Economy in South Korea and Cambodia

• 주지형\*(Jihyung Joo)

Transition from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s to Electric Vehicles (EVs) is essential for decarbonization. EV battery technology lies at the core of this shift. However, battery production relies on extractive, resource-intensive materials, and their life cycle raises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al concerns, necessitating a circular economy approach. While substantial research focuses on technological innovations for end-of-life (EOL) EV battery recycling and repurposing, limited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global evolution of policies and institutions that can lead to viable business models and establish an effective EV battery circular economy.

EV batteries are embedded in a globalized supply chain, requiring enhanced monitoring, data sharing, and regulatory cooperation. As a frontrunner in environmental policy, the EU adopted the Battery Regulation in 2023 to govern batteries within a circular economy framework, applied across the global supply chain. Yet there is limited understanding of how the circular economy policy is transferred, adapted, and integrated across countries, with particularly scarce research on how policy transfer unfolds in developing contexts. Based on document analysis and interviews with policy stakeholders, this study examines how EV battery circular economy policy has been transferred and evolved differently in South Korea and Cambodia. Drawing on policy transfer theory, we analyze the role of agency and institutions to assess who transfers policy, why, to what extent, and with what outcomes.

With diffusion of regulatory norms from the EU, South Korea exhibits a combination of voluntary lesson-drawing and response to international pressures to demonstrate strategic emulation driven by the industry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 to establish institutions. In Cambodia, donor-supported programmes led by the EU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ominate early institutional development, reflecting international pressure and expert influence, while the process remains government-led.

Through this comparative case study, we contribute by examining how international policy transfer occurs in a developing context, often characterized as externally driven or coercive, and further propose future agendas to prevent policy failure—such as uninformed, incomplete, or inappropriate transfer—in advancing the EV battery circular economy for Cambodia.

---

\* 주저자, 한양대학교 국제학부(joojihyung@hanyang.ac.kr)

## 2. 학생 세션 1

가. 주제 : 기후적응과 도시 회복력

나. 개최일 및 장소

- 개최일 : 2026년 02월 27일(금) 14:00~15:30
- 장 소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82동 103호

다. 좌장

- 문현주(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라. 토론자

- 김하나(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전철현(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전략연구과 임업연구사)
- 나미연(동국대학교 생태계 서비스 연구소)

마. 발표자

- 진건호(충북대학교 박사과정)
  - 디지털 트윈 기반 GI 시설의 침수 저감 효과 분석 및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 캠퍼스 리빙랩 실증을 중심으로
- Zhang Jinghong(서울대학교 박사과정)
  - Built-Type Diversity and Its Socio-Geographic Links: A Clustering Study of Asian Cities using LCZ Classification

# 초록

## 디지털 트윈 기반 GI 시설의 침수 저감 효과 분석 및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 캠퍼스 리빙랩 실증을 중심으로 Quantitative Analysis of Flood Mitigation Effectiveness and Policy Implications of Digital Twin-Based Green Infrastructure (GI): Evidence from a Campus Living Lab

• 진건호\*\*(Geonho Jin), 정주희\*\*\*(Juhee Jeong), 반영운\*\*\*\*(Yongun Ban)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강우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 침수 위험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높은 불투수율과 밀집된 기반시설을 보유한 도시 및 준도시 공간에서 물순환 왜곡과 배수능력 한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대학 캠퍼스는 넓은 부지와 복합적인 토지이용 구조를 갖춘 소규모 도시 형태로 물관리 및 침수 대응 측면에서 도시 축소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저류조 및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이하 GI) 시설은 설치 이후 정적 운영에 의존하여 실제 극한강우 상황에서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충북대학교의 경우 우수저류시설이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존 시설 중심의 물관리 체계가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 변 동성과 실시간 대응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충북대학교 캠퍼스를 대상으로 GI 시설의 디지털화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침수 저감 효과 및 정책적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대상지의 토지이용 특성과 물순환 구조를 분석하고 토지 이용별 빗물관리 부담량과 GI 단위효과량을 기반으로 시설 용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합리식을 활용하여 강우강도 67.4mm/h 조건에서 GI 적용 전후의 피크유출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GI 시설 적용 시 캠퍼스 전체 피크유출량은 10.39m<sup>3</sup>/s에서 7.75m<sup>3</sup>/s로 약 25.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교육시설, 녹지, 도로 등 주요 토지이용 유형 전반에서 23.6~28.0% 수준의 유출 저감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 정적 GI 시설에 디지털 기반 운영 및 최적화 전략을 적용할 경우 동일한 물리적 시설 조건에서도 침수 저감 효과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는 센서 기반 수위 및 유량 모니터링, AI 기반 강우 및 수위 예측,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 자동 제어 시스템을 통합하여 GI 시설을 기존의 정적 구조물에서 동적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기반 물관리 인프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디지털화된 GI 시스템은 강우 예측에 기반한 선제적 저류공간 확보, 실시간 배수 제어, 시설 성능 진단 및 유지관리 최적화를 가능하다. 동일한 설치 용량에서도 등가저류효과를 향상시켜 신규 인프라 확충 없이도 침수 대응 역량을 개선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시설 확충 중심의 구조적 대응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운영 중심의 적응형 물관리 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현재 국내 GI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국토부 소관 법령과 「물환경보전법」 등의 환경부 소관 법령 내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설치 주체는 존재하나 유지관리 주체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유지관리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운영 및 성능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GI 시설이 단순한 조경 및 환경 개선 시설 수준에 머물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디지털 기반 GI 운영 및 성능 정량화 결과는 GI 시설을 도시 배수 및 침수 대응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 제도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GI 시설을 디지털 기반 운영형 인프라로 전환하고 그 침수 저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기존의 시설 설치 중심 접근에서 운영 및 관리 중심 접근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도시 물관리의 효율성과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고 기후변화 적응 및 물순환 회복을 통한 도시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정책을 지원하는 핵심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대학 캠퍼스를 리빙랩으로 활용한 실증 기반 접근은 전국 대학 캠퍼스로의 확장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 단위 확장이 가능한 정책 적용 모델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갖는다. 특히, 디지털 기반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과 스마트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의 통합적 운영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3A2A01090919)

\*\* 주저자,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cjstjd568@naver.com)

\*\*\* 공동저자,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wjddnjs7621@chungbuk.ac.kr)

\*\*\*\* 교신저자,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byubyu@chungbuk.ac.kr)

## Built-Type Diversity and Its Socio-Geographic Links:

### A Clustering Study of Asian Cities using LCZ Classification

• ZHANG JINGHONG\*, 김태형\*\*

With the rapid urbanization in Asia, urban population and built-up land have grown significantly in the last 50 years. This has caused micro-climate changes and the heat island effect, which are major challenges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Local Climate Zones (LCZs) provide a standardized way to classify surface cover and built environment features, creating a scientific base for comparing micro-climates across regions. However, most existing studies focus only on a single city or region. There is a lack of large-scale analysis across many Asian countries. Also, there are research gaps in comparing how different unsupervised clustering algorithms perform and identifying the socio-geographic determinants that explain why built forms vary across diverse Asian contexts.

This study uses clustering methods to show the diversity of built environments in Asian cities. It explores the links between these built form patterns and factors like population density, economic level, climate type, and geographic location. The sample includes 30 representative cities across East, Southeast, South, Central, and West Asia. Data sources include LCZ maps from Google Earth Engine, World Bank city data, and national statistical yearbooks. For the methodology, this study compares four clustering algorithms: K-means, hierarchical clustering, Density-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s with Noise(DBSCAN), and Gaussian Mixture Model (GMM). We evaluate the clustering quality using silhouette score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and radar plots.

The results show that hierarchical clustering using the Ward linkage method works best for high-dimensional built-type data. It achieved a silhouette score of 0.7204 and clearly classifies Asian cities into six categories with different built-type profiles. These categories range from high-density compact cores to open low-rise sprawl, sparsely built areas, and heavy industry-dominated areas. Statistical tests (Kruskal-Wallis and chi-square) showed that among all dimensions, only population density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across the clusters ( $p$ -value = 0.009). Factors like GDP per capita, Köppen climate classification, and coastal status did not show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clustering results. This evidence suggests that demographic pressure, rather than economic level or climatic adaptation, serves as the primary explanatory driver for urban morphological heterogeneity in Asia.

The findings uncover the underlying logic of Asian urban growth, suggesting that built form is predominantly driven by population density rather than wealth or climate conditions. This framework gives urban planners a tool to identify urban diversity. The six built-type profiles provide an empirical base for heat island mitigation and microclimate optimization. Future policies should move away from using just one indicator. Instead, they should use specific management plans based on city building patterns to make urban environments more sustainable.

---

\* 주저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박사과정 학생(zhangjh@snu.ac.kr)

\*\* Corresponding Author,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교수(taehyoung.gim@snu.ac.kr)

---

### 3. 학생 세션 2

가. 주제 : 탄소중립 산업전환과 재생에너지 거버넌스

나. 개최일 및 장소

- 개최일 : 2026년 02월 27일(금) 14:00~15:30
- 장 소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82동 115호

다. 좌장

- 정영근(선문대학교 교수)

라. 토론자

- 권재원(아주대학교 교수)
- 안대한(국가녹색기술연구소 연구원)

마. 발표자

- 강미랑(서울대학교 박사과정)
  - 청정 에너지의 채택과 사용 간의 격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사례
- 박가영(서울대학교 석사과정)
  - 새만금 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비판적 재분석

# 초록

## 청정 에너지의 채택과 사용 간의 격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사례

### The Adoption-Use Gap in Clean Energy: Cases in Sub-Saharan Africa

• 강미랑\*(Mi Rang Gang), 홍종호\*\*(Jong Ho Hong)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는 청정 조리 기술의 채택과 지속적 사용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10개국의 인구 및 보건조사(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DHS)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이러한 채택-사용 격차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조리 기술 전환은 미전환, 부분 전환, 완전 전환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완전 전환은 개량형 화덕(ICS)과 청정 연료를 병행 사용하는 상태로 정의하였으며, 부분 전환은 전통적 연료 및 조리 기구와 현대적 대안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순서형 로짓 모형의 추정 결과, 가구 소득 수준과 완전 전환 확률 사이에는 유의한 비선형적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농촌 가구는 소득과 교육 수준을 통제한 이후에도 전환 완료 확률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료 공급망과 사후 서비스의 최종 전달 단계에서의 제약이 여전히 구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성 가구주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고 맥락 의존적으로 나타났으나, 농촌 지역 정책 대상 설정에서는 여전히 유의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교육 수준은 전환 단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정보 접근성과 학습이 청정 조리 기술의 지속적 사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격 보조 정책만으로는 청정 조리 기술의 채택-사용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의 연료 공급망 강화, 유지보수 및 사후 서비스 확대, 그리고 장기적 비용과 성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동시에, 정책의 설계뿐 아니라 실행을 제약하는 정치경제적 맥락을 고려하고, 지역적 제약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역량과 책무성을 강화하여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지역사회 편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병행해야 한다.

\* 주저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예정(2026년 2월 졸업 예정)(mfree37@snu.ac.kr)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hongjongho@snu.ac.kr)

## 새만금 풍력산업 클러스터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재분석

### Reassessing the Cost-Benefit Analysis of the Saemangeum Wind Power Industry Cluster Project

• 박가영\*(Parkgayoung), 정의정\*\*(Jungeuijung), 홍종호\*\*\*(Hongjongho)

본 연구는 2009년 수행된 「새만금 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가운데, 풍력발전 ‘시범단지’ 부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여 비용·편익 산정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보완한 재분석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재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예비타당성조사는 풍력발전 시범단지, 연구개발센터, 산업 클러스터를 통합 사업으로 설정하여 평가하였으나, 본 연구는 이 중 실증적 성격이 가장 강하고 환경·기술적 영향이 집중되는 시범단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범위를 제한하였다.

비용 측면에서는 시범단지 조성으로 인한 환경적 외부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철새 서식지 훼손과 갯벌의 수질정화 기능 상실을 사회적 비용으로 계량하였다. 철새 피해 비용은 선택실험법을 통해 추정된 지불의사액을 편익이전 기법으로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갯벌 수질정화 기능 손실은 대체비용법을 활용하여 화폐가치화하였다.

편익 측면에서는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적용된 배출권 거래 수익이 당시 제도적 여건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외하고,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편익과 시범단지 실증을 통해 발생하는 학습효과(Learning-by-Doing)에 따른 기술적 파급효과를 대안적 편익 항목으로 반영하였다.

재분석 결과, 환경 외부비용과 기술 실증 편익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비용편익비(B/C)는 기존 분석 대비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1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순현재가치(NPV) 역시 음(-)의 값을 유지하였다. 이는 시범단지 단위의 재생에너지 실증 사업이 단기적 경제성 기준만으로는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기술 축적과 탄소 감축이라는 장기적·전략적 가치가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체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향후 국가 주도의 재생에너지 실증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분석 단위의 명확화와 함께 환경 외부효과 및 기술 실증 편익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 공동저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협동과정 환경교육전공(rkduddk45@snu.ac.kr)

\*\* 공동저자,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농업·자원경제학전공(0325jeui@snu.ac.kr)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hongjongho@snu.ac.kr)

## 4. 일반 세션 2

가. 주제 : 글로벌 정책 확산과 정의로운 전환

나. 개최일 및 장소

- 개최일 : 2026년 02월 27일(금) 15:50~17:20
- 장 소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82동 114호

다. 좌장

- 문태훈(중앙대학교 교수)

라. 토론자

- 김도원(충북대학교 교수)
- 김문현(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지환(제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마. 발표자

- 김경원(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ESG 규제 환경 변화와 건물부문 탄소중립 정책의 주요 과제
- 김경원(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국내외 지방정부 금고 지정 제도의 ESG 정책 동향과 발전 방향
- 이성규(고려대학교 비교거버넌스연구소 박사후연구원)
  - EU 적응정책에서의 정의로운 회복탄력성(just resilience) 고찰

## ESG 규제 환경 변화와 건물부문 탄소중립 정책의 주요 과제\*

### Evolving ESG Regulations and Key Policy Challenges for Building-Sector Carbon Neutrality

• 김경원\*\*(Kyungwon Kim)

전 세계적으로 자국 보호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각국은 자국 경제를 중심으로 한 산업·통상·금융 정책을 다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된 ESG 정책은 공시 및 공급망 실사 규제를 통해 기업의 탄소정보 공개를 ‘자율적 보고’ 수준에서 ‘규범적 책임’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해 왔다. 다만 해당 규제는 국가별 제도·산업 구조와 상호작용하며 적용 범위와 이행 방식이 조정되는 단계에 놓여 있다. 특히 지속가능성 공시 및 금융 규제의 확산, 공급망 실사 의무의 강화는 건물 자산의 온실가스 성과를 재무적 위험요인으로 가시화하는 경향을 강화한다.

건물부문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계·시공 및 준공 단계에서의 내재배출뿐 아니라 운영 단계의 배출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운영 단계는 정책 개입의 효과가 비교적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이며, 건물의 실질적 에너지 사용과 배출 감축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핵심적이다. 그러나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설비·자산을 보유한 임대인과 실제 에너지 소비의 주체인 임차인의 행태가 결합된 결과로 나타나므로, 임차인의 참여 없이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제약된다. 따라서 임대인-임차인 간 협력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책임을 공유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동시에, 금융과 임차인의 행동을 연계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신뢰 기반의 건물 운영·관리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 도시의 건물부문에 요구되는 ESG 규제 환경 변화에 주목하여, 데이터 및 거버넌스 전환의 방향을 탐색해 규제 이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비용 및 벌금 부담, 준비 기간의 촉박성, 책임의 불공정성, 처벌·규제의 불확실성 등에 대한 우려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운영적 해법을 찾고자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목적·적용 범위·지표 구성이 서로 다른 GRESB, BREEAM, LEED 등 다양한 평가·인증 제도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원적 평가체계 환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녹색 임대차를 통해 협력할 수 있도록 ‘기본규칙 설정-보상 인센티브-측정·보고·검증(MRV)’으로 이어지는 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서울연구원 연구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주저자, 서울연구원 연구위원(kwkim@si.re.kr)

## 국내외 지방정부 금고 지정 제도의 ESG 정책 동향과 발전 방향\*

### Development Directions of ESG Policy Trends in Local Government Treasury Bank Designation Frameworks in Korea and abroad

• 김경원\*\*(Kyungwon Kim)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 주요 도시들은 공공재정 운용과 금융기관 선정 과정에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요소를 점진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공금 예치와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은 단순한 재무적 안정성을 넘어, 책임 있는 금융 운영 방식과 공공가치 실현의 핵심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은행위원회가 공금 예치 가능 은행을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서울시와 구조적으로 가장 유사한 사례로 평가된다. 뉴욕시는 재무건전성뿐 아니라 지역사회재투자법(CRA) 최소 등급 유지, 저소득지역 금융 접근성, 차별금지, 공정대출 및 평등고용 준수 여부를 지정 요건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사회적 책임 요소가 가점이 아닌 필수 요건으로 제도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영국 광역런던청(GLA)은 '금고' 개념 대신 공공 조달 및 재무자금관리전략을 통해 공공자금 운용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안전성·유동성·수익성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계약에 사회가치 또는 책임조달 요소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ESG 요소를 자금 운용과 계약 체계 전반에 구조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일본 도쿄도의 경우 법령상 지정금융기관 개념은 존재하나, 실제 공금 예치 기준은 안전성·유동성·신용도 중심으로 운영되며, ESG 요소는 공금관리보다는 별도의 정책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금고 지정 제도가 표준화된 평가체계를 통해 ESG 요소를 일부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를 갖추고 있으나, 해외 주요 도시와 비교할 때 명확한 정책 목적과 체계로 제도화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ESG 요소를 선택적·자율적 평가 수준을 넘어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기준으로 재설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금고 지정 제도의 정책적 정합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서울연구원 연구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주저자, 서울연구원 연구위원(kwkim@si.re.kr)

# 초록

## EU 적응정책에서의 정의로운 회복탄력성(just resilience) 고찰

### Developing Energy Transition Model for Mega City

• 이성규\*(Sungkyu Lee)

기후변화가 현실화 되어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취약계층이 기후변화로 인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취약계층은 기후변화에 더 많이 노출되고 더 취약하다. 그 중에서도 유럽연합(EU)은 취약계층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에 주목하였다. EU는 2020년대 초반부터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서 취약계층의 회복탄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정의로운 회복탄력성(just resilience)라고 개념화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며 정책에 명시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의로운 회복탄력성의 개념과 그것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국내 적응정책에 주는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기후정책 논의에서 정의의 문제는 주로 온실가스 감축 책임의 분담이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비용 배분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영향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피해에 대응하는 적응(adaptation) 정책의 중요성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적응 정책은 기후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해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동시에 어떠한 집단이 보호의 대상이 되고, 어떠한 위험이 우선적으로 관리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적응 정책은 본질적으로 분배와 선택의 문제를 내포하며, 정의의 관점과 분리되어 논의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학계와 정책 영역에서는 기존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개념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회복탄력성은 외부 충격에 대응하여 시스템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핵심 프레임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주로 도시, 지역, 국가와 같은 집합적 단위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사회 내부의 이질성과 개별적 취약성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시스템 차원에서의 '회복'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삶의 조건은 오히려 악화되는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회복탄력성 개념의 사회적 함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제기되고 있다. 정의로운 회복탄력성(Just Resilience)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이 구조적 불평등을 재생산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주저자, 고려대학교 비교거버넌스연구소 박사후연구원(sungkyulee@korea.ac.kr)

## 5. 학생 세션 3

가. 주제 : 녹색전환과 삶의 질

나. 개최일 및 장소

- 개최일 : 2026년 02월 27일(금) 15:50~17:20
- 장 소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82동 115호

다. 좌장

- 한택환(서경대학교 교수)

라. 토론자

- 권재원(아주대학교 교수)
- 김하나(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이지원(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선임연구원)

마. 발표자

- Zhaowen Deng(서울대학교 박사과정)
  - From Environment to Emotion: Understanding Relational Wellbeing in the 15-Minute City
- 원동인(서울대학교 석사과정)
  - MZ세대의 디지털 디톡스 여행 참여 의향 탐색 - 디지털 피로 경험을 중심으로
- 박가영(서울대학교 석사과정)
  -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관점에서 본 개발이익공유제의 사업성: 전남 신안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 초록

## From Environment to Emotion: Understanding Relational Wellbeing in the 15-Minute City

• Zhaowen Deng, Tae-Hyoung Tommy Gim

The '15-minute city' (15-MC) has gained increasing attention as a key spatial strategy within broader urban green transition agendas. By promoting walkability, reducing car dependency, and encouraging low-carbon daily mobility, the model is widely regarded as an effective pathway to enhance urban liveabilit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However, the 15-MC does not merely improve the efficiency of service access. By shortening spatial distances and increasing the probability of incidental encounters and everyday contact, it reshapes the structure of social interaction within communities. A proximity-oriented urban form facilitates the formation of familiar social networks, strengthens place attachment, and enhances residents' sense of participation and agency in community affairs.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the spatial configuration of the 15-minute city may therefore influence individuals' relational wellbeing (RWB) by affecting the density and quality of everyday social interactions. To address this theoretical and empirical gap, this study examines the spatial association between 15-MC and RWB at the intra-urban scale. We construct a hexagonal grid-based spatial framework to integrate multi-source urban data. RWB is operationalized through large-scale social media text analysis, utiliz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techniques to classify posts into multiple RWB dimensions. Meanwhile, 15-MC indicators are quantified using measures of accessibility, functional diversity, and distribution environmental justice. To capture spatial dependency and neighbourhood effects, we implement a Graph Convolutional Network (GCN) model, in which each hexagonal grid cell is treated as a node and adjacency relationships are defined based on spatial contiguity. This approach enables the identification of structural associations between 15-MC and RWB patterns by capturing complex spatial interactions that cannot be fully addressed by conventional regression models. Results indicate that conventional OLS models exhibit limited explained variance for relational wellbeing, while spatial graph-based models demonstrate improved predictive performance, indicating the presence of spatial dependency effects. Permutation-based importance analysis shows that structural imbalance in urban functional configuration, particularly city-level KL divergence (mean  $\Delta$ RMSE = 0.056), exerts the strongest explanatory influence, substantially exceeding that of functional diversity and individual amenity-based accessibility indicator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15-minute city framework and relational wellbeing lies less in facility counts and more in the structural balance and spatial configuration of urban functions. This implies that proximity-oriented green transition strategies may generate differentiated social outcomes depending on how urban functions are spatially configured and distributed. Proximity-oriented planning strategies should therefore move beyond single-amenity provision and incorporate considerations of functional configuration and the balanced spatial distribution of essential services to support socially embedded and inclusive urban environments.

---

\* 주저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zhaowen.deng@snu.ac.kr)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taehyoung.gim@snu.ac.kr)

---

## MZ세대의 디지털 디톡스 여행 참여 의향 탐색: 디지털 피로 경험을 중심으로

### Exploring the Receptivity to Digital Detox Tourism among Millennials and Gen Z: The Role of Digital Fatigue.

원동인\*(Dongjin Won), 박승빈\*\*(Seungbin Park), 손승우\*\*\* (Seungwoo Son),  
김태형\*\*\*\*(Tae-hyoung Tommy Gim)

디지털 사회에서 현대인은 일상 전반에서 디지털 과잉에 노출되어 있다. 디지털 과잉은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디지털 피로를 유발하며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자율적 통제력을 약화시킨다. 이런 맥락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과 온라인 연결을 의식적으로 차단하는 디지털 디톡스 실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198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출생한 MZ세대를 중심으로 주말 마라톤, 템플 스테이와 같은 디지털 디톡스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관광 산업에서도 디지털 디톡스를 결합한 디지털 디톡스 여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 디톡스 여행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줄여 여행 몰입도를 높이고 회복, 치유, 휴식 등 정신적 웰빙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디지털 디톡스 여행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해당 여행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는 연구가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관광객의 여행 동기를 이해하고 관광시장의 수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이론적 틀로 활용하여 디지털 디톡스에 대한 인식과 디지털 피로 수준이 여행 중 디지털 디톡스 실천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MZ세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신체적, 인지적, 정신적 디지털 피로 수준, 디지털 디톡스의 기대 효과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디지털 기기 통제 가능성에 관한 인식과 여행 중 디지털 디톡스 실천 의향 간의 관계를 검증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피로라는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 중 하나로 디지털 디톡스 여행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현대인의 행동 동기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지닌다. 나아가 본 연구는 관광객의 행동 동기를 분석하여 디지털 디톡스 여행 시장의 전략 수립과 활성화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주저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석사과정. email: ehdds10714@snu.ac.kr

\*\*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수연구원. email: seungbin.park@snu.ac.kr

\*\*\* 교신저자,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email: swson@kei.re.kr

\*\*\*\* 지도교수,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정교수, 환경계획연구소 소장, 협동과정 도시설계학 겸무교수, 융합전공 지역·공간분석학 겸무교수, 지속가능발전연구소 겸무연구원. email: taehyoung.gim@snu.ac.kr

##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관점에서 본 개발이익공유제의 사업성: 전남 신안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 Financial Feasibility of Development Profit-Sharing Scheme from the Perspective of Small-Scale Solar Power Producers: A Case Study of Shinan County, Jeollanam-do, South Korea

• 박가영\*(Gayoung Park), 윤순진\*\*(Sun-Jin Yun)

이 연구는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시행 중인 태양광 개발이익공유제를 대상으로, 주민이 아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관점에서 해당 제도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가 개발이익공유제가 주민 수용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주로 다루어 온 반면, 제도에 참여하는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실제 수익성과 투자 유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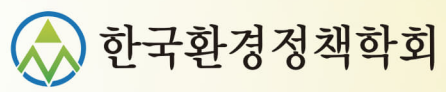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신안군에 위치한 997.5kW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사례로, 실제 자본비용 자료와 2023~2024년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전량 특성을 도출하고, 설계 수명 20년을 기준으로 한 재무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이익공유제 시행 여부에 따른 경제성을 대안별로 비교·분석하였으며,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수익성지수(PI), 비용편익비(B/C)를 활용해 평가하였다. 정량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발전사업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도 병행하였다.

분석 결과, 개발이익공유제를 실시하지 않는 대안 B의 NPV, PI, B/C 값이 개발이익공유제를 포함하는 대안 A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자기자본 내부수익률(IRR)은 오히려 대안 A에서 근소하게 더 높았다. 이는 개발이익공유제가 발전사업자의 직접적인 수익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주민 수용성 확보와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터뷰 분석 결과 또한, 발전사업자들은 개발이익공유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갈등을 감소시키는 점을 중요한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단일 사례 분석이라는 한계를 가지나, 실제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이익공유제를 발전사업자 관점에서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주저자, 서울대학교(rkdudk45@snu.ac.kr)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ecodemo@snu.ac.kr)



한국환경정책학회